



## 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

### - 관계부처 합동 「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」 발표-

- ▶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 부처 역할 강화
- ▶ 비전문외국인력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
- ▶ 외국인력 관련 정책 심의기구의 일원화
- ▶ 민간 도입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성 강화
- ▶ 전문·숙련인력 확대 및 유학생 활용 강화 등

□ 정부는 6.20(목)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「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
○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,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\* 합동으로 「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(단장: 국무조정실장)」를 구성하여,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\*\*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.

\* 법무부, 고용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중기부, 산업부, 행안부, 여가부 등 11개 부처

\*\* (현장) 농·어업 등 업종별·지역별 의견수렴(9회), (전문가) 대학·연구소 등 전문가 토론회(7회)

○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▲수요자 중심, ▲통합적 관리, ▲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, ▲비전문인력, ▲전문인력, ▲유학생, ▲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.

○ 이날, 한 총리는 “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,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”고 하면서 “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”고 말했다.

## <주요 내용>

### 1.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

-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.
  -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 수요에 대응하여,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였다.
    - \* (예) 농촌 계절근로의 경우, 지자체 수요파악·신청→법무부 승인 방식이어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식품부의 수요전망 및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어려움
  -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,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한다.
    - \* ▲(농식품부) 지역·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 → 외국인력 수요전망 분석
    - ▲(해수부)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→5년 수급관리 방안 마련
    - ▲(고용부) 상시 분석센터 설치(소업종), 세부업종 단위 주기적 인력수요 심층 분석



### 2. 비전문인력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

-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·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.
  - 그간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\*하여 노동시장 전체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.
    - \* 계절근로(E-8)-법무부, 고용허가(E-9, H-2)-고용부, 선원취업(E-10)-해수부
  -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 정책위원회\*(위원장: 국무조정실장)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.
    - \* 관련법 개정 전까지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

※ (예) **어업·선원 분야**의 경우, 계절근로·고용허가·선원취업 등 **비자별** 개별 도입 → **어업 분야 인력 전반 종합 검토** 등 노동시장 전체 관점 **총량 조정** 및 **종합 대응**



### 3.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

□ 정부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·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**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(위원회)를 일원화**한다.

○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,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, 정책의 **연계 및 총괄·조정**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.

\* ▲ 외국인정책위원회(위원장:총리, 간사부처:법무부), ▲ 외국인력정책위원회(위원장:국조실장, 간사부처:국조실), ▲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(위원장:총리, 간사부처:여가부)

○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 정책 및 외국인력정책,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·조정하는 **(가칭)외국인·다문화정책위원회(위원장:총리)**로 일원화한다.

\* 분과위원회(외국인력, 외국인, 다문화가족) 구성 및 분과간 조정을 위해 정책협의체(의장: 법무부 장관) 운영, 이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'외국인력정책위원회(국조실장)'를 '외국인력정책분과위원회'로 연계 운영

※ (예) 외국인 근로자,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적 연계



#### 4. 민간도입 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 강화

-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.
  -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.
  - 이에 따라,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·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, 공공형 계절근로\*도 확대해 나간다.

\*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 방식  
 ▲ 농업: ('23) 19개소 → ('24) 70개소, ▲ 어업: ('25) 양식업에 신규도입



#### 5. 전문·숙련인력 확대 및 유학생 활용 강화

-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유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·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육성한다.
  -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(E-9, E-10)의 숙련기능인력(E-7-4)으로 전환규모를 확대\*하고 전환요건 완화\*\*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.

\* ('22년) 2천명 → ('23년) 3.5만명 → ('24년) 3.5만명

\*\* ① 11개 평가항목을 5개로 간소화(학력, 보유자산, 자격증, 교육·연수 경험 등 제외),  
 ② 사업장별 허용인원 확대(내국인의 20%이내 → 30%이내, 뿌리산업 등은 50% 이내),  
 ③ 전자민원 신청 및 전담심사팀 운영 등

○ 또한,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\* 및 구직·연수 기회도 확대\*\*해 나간다.

\* 사무·전문직에 한정된 유학생 취업분야를 비전문분야(E-9)로 확대 추진(외고법 개정)

\*\*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, 지방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맞춤반 운영, 지역 우수기업 취업연계 등

### <향후 추진계획>

□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.

○ 법률안 제·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, 착실히 이행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 체류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별첨: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(회의 안건)

담당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한동희 (044-200-2371)
		담당자	사무관	조정희 (044-200-2372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렬 (044-200-2373)
<공동>	법무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재형 (044-2110-4055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석 (044-2110-4087)
<공동>	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오기환 (044-202-7157)
		담당자	서기관	이재인 (044-202-7145)
<공동>	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홍인기 (044-201-1711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우 (044-201-1721)
<공동>	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책임자	과 장	정준호 (044-200-5460)
		담당자	사무관	은재현 (044-200-5471)
<공동>	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민석 (044-200-5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행숙 (044-200-5743)
<공동>	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권영학 (044-204-7440)
		담당자	사무관	민준현 (044-204-7450)
<공동>	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	책임자	과 장	송지은 (02-2100-6371)
		담당자	사무관	최선우 (02-2100-6372)



#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

## 기본 방향

☑ 수요자 중심 ☑ 통합적 관리 ☑ 공공 책임 강화를 통해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

### 인력정책 및 수급전망

비자별(단기) 대응  
➔ 업종별(중장기) 분석

### 인력규모 결정

비자별 상이·복잡  
➔ 통합·연계

### 도입·체류 관리

민간의존/관리체계 미흡  
➔ 공공 책임 강화

## 주요 내용

### 1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 등 부처 역할 강화

**현행** 비자별 수요에 단기대응 ➔ **개선**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 + 부처 인력정책 연계

계절근로 (E-8)	법무부	농축산업 (E-8, E-9)	농식품부
비전문취업 (E-9)	고용부	어업 (E-8, E-9, E-10)	해수부
선원취업 (E-10)	해수부	제조/건설/서비스업 등 (E-9)	고용부 + 관계부처

**효과** 인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 및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 수립

### 2 비전문인력의 총량관리 체계 구축

**현행** 비자별 인력관리 ➔ **개선**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총량 조정



**효과** 노동시장 빈자리 해소 및 외국인력 도입의 종합적·탄력적 대응

### 3 외국인(력)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

**현행** 3개 정책심의기구 각각운영 ➔ **개선** 총리 주재 위원회로 일원화



**효과** 유사정책간 연계·조정 및 효율적 위원회 운영 가능

### 4 민간 도입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 강화

**현행** 민간업체 개입, 과도한 비용 발생 ➔ **개선** 민간업체 관리·감독 및 공공책임 강화

선원취업	✓ 민간업체 도입	선원취업	✓ 민간업체 관리·감독 강화 - 민간업체 자격기준, 평가·제재
계절근로	✓ 민간업체 개입	계절근로	✓ 도입전문기관 지정·MOU 체결지원 ✓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 확대

**효과** 불합리한 송출비용 부담 및 인력 이탈 완화

### 5 (기타) 전문인력 유치, 숙련인력 양성, 유학생 활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

\* 인재 유치·양성 정착을 위한 비자유건 완화, 유학 졸업생 취업·연수 기회 확대 등